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놓고 여야 ‘수싸움’

재표결 가결되려면 여당서 8표 이탈표 나와야

민주 “韓대표·친한계 의원 현명하게 판단해야”

국힘 “의원 단일대오 전혀 흔들림 없다” 강조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결이 12월10일로 미뤄진 가운데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 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

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여당도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벌써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한 대표도(자신과) 윤석열 부부가 공존하는 길이 없다는 것은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 표결 때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의원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집단 기권’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실상의 공개투표”라며 “의원들 ‘입들막’을 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 맹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전망과 관련해 “최소한(저와)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28일로 예상됐던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로 미뤄지는 상황 변화가 있는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투

표 방식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투표 방식과 관련해 의원들의 제안이 있으면 별도로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라며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3선 의원들이 최근 비공개 만찬을 하고 자신에게 ‘당원 계시관 논란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의견 모으거나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힘 추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특검법 재의결

일정에 합의했다.

애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총력전으로 표 대결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재의결 시기와 무관하게 특검법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이지만, 최근 당원 계시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성격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증폭된 것은 재의결의 변수로 꼽혀왔다. /김진수기자

“지방의회, 부적절 수의계약 31억”

권익위, 20개 지방의회 2년여간 이해충돌 실태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31억원 상당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 업무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 가운데 308명(59.5%)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 지방의회(광역 7개·기초 13개)를 대상으로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과 가족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권익위 점검 결과, 이 같은 수의계약은 지난 2년간 총 1천301건, 약 31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지방의원이나 가족이 일정 자본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259건(약 17억8천만원) 포함됐다. 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했지만 지분을 처분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하고 해당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를 지출한 경우도 176건(약 5천800

만원) 있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 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원 285명은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운영했던 영리 업체 등을 빼고 제출하는 꼼수도 적발됐다.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랑까지 관용차를 이용하고 공부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지방의원은 본인의 의인 심사로 본인이나 가족 등이 이익·불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의인 심사를 회피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과거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엔 확인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들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는 한편,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 과태료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회 이해충돌 지침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 살롱에서 한국 및 중앙아시아 지방정부 대표,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중앙아 지방협력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도지사協 ‘제1회 한-중앙아 포럼’ 개최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 본격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 살롱에서 ‘제1회 한-중앙아 지방협력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협의회가 주최하고 외교부와 KF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이 후원했으며, 한국 및 중앙아시아 지방정부 대표, 중앙아시아 대사관,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의 카라칼파크스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카르시 시장, 타슈켄트시 부시장 등 3개 지자체에서 14명이 참석했다.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시 부시장, 투르케스탄주 부지사, 악토베주 투자관광청 부시장 등 3개 지자체에서 21명이 참여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바트켄주 부지사 등 2명, 타지키스탄에서는 단가랴구 구청장 등 2명이 함께했다. 이 밖

에도 중앙아시아 5개국 중 4개국의 대사를 포함한 20여명의 대사관 관계자가 자리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광주·대구·대전·울산·전남·강원·충북·전북·경남·서울·도봉구·부여군·경주시·구미시 등 13개 지방정부와 외교부, KF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도 참여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앙아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 간 외교활동이 필수적이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교류 플랫폼을 제공해 상호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이재명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장관 거부권 시사…기가 막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을 두고 “참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매패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농업은 국제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산업이 아닌 나라의 식량주권이 걸린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이를 장관이 ‘농망법’이라고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극도로 절제하며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이제는 (정부 부처의) 담당 과정이 거부권도 들고 나올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쌀값(가마당) 20만원을 지키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공약이었는데, 집단 망각증에 걸린 것인지 스스로 한 말을 함부로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거의 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민주당이 개정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로 돌아섰다”며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 구장)
- 골프채·골프용품 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